



# 일본의 전기·전자 분야 통상 정책



정재관  
KEA특허지원센터장

## 1. 서론

전기·전자 제품은 자동차와 함께 일본의 무역 중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는 분야이다. 또한 일본의 많은 전기·전자 메이커가 해외에 진출하고 있어, 일본의 산업분야 중 가장 국제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한편, 전기·전자 분야와 관련하여 일본은 우리나라 및 중국과 같은 주변 경쟁국과의 경쟁에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부담은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특허분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기업과 일본기업간 전기전자분야 주요 특허분쟁 사례

| 기술분야    | 분쟁 발생/종료시기 | 제소업체                  | 피제소업체                 |
|---------|------------|-----------------------|-----------------------|
| PDP     | 2005. 12   | 삼성 SDI                | 마츠시타전기산업              |
| 플래시 메모리 | 2005. 10   | 도시바                   | 하이닉스                  |
| PDP     | 2004. 11   | Matsushita (파나소닉 코리아) | LG Elec               |
| 위성 DMB  | 2004. 5.   | 도시바                   | 삼성, LG전자, 기륭전자, 현대오토넷 |
| PDP     | 2003       | 후지쓰, 마쓰시타, NEC, 파이어나어 | 삼성SDI, LG전자           |
| LED     | 2003       | 니치야                   | 삼성전자, LG전자            |
| 반도체     | 2002       | 도시바                   | 삼성전자                  |

위와 같은 현상 이외에 자국 전기·전자 분야 진흥을 위하여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하에서 제시할 일본의 전기·전자 분야 통상 정책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제시한 일본의 전기·전자 분야 통상 정책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 2. 일본의 전기·전자 분야 통상 정책

### 1) WTO를 통한 무역·투자 장벽의 철폐

일본은 많은 전기·전자 제품의 수출국으로, 대부분의

전기·전자 제품의 관세를 철폐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선진국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에 대한 대책으로 WTO로의 교섭을 통한 관세의 철폐를 진행시키고 있다. 그리고 원산지 규칙이나 룰(안티·덤핑, 세이프가드 등) 등 제도와 관련한 비관세 무역장벽 철폐를 위한 노력을 통해 일본의 전기·전자 기업의 세계 시장 공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각국의 관세율(MFN 세율)

| 품목          | 미국    | EU       | 중국 | 인도 | 일본 |
|-------------|-------|----------|----|----|----|
| TV          | 0 - 5 | 14       | 30 | 15 | 0  |
| DVD 플레이어    | 0     | 14       | 20 | 15 | 0  |
|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 | 2.1   | 4.9 - 14 | 0  | 15 | 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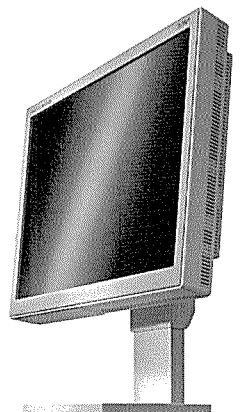
\* PC나 반도체, 휴대 전화 등의 정보 통신 관련 제품에 대한 관세는, WTO의 정보기술 협정(ITA)에 의해 많은 나라에서 철폐되고 있습니다만, 중남미 제국 등 관세가 남는 나라도 있습니다.

### 2) EPA의 확대

한편, 기업의 생산·판매 네트워크가 확대·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지원을 위해 WTO 협정보다 무역·투자의 자유화를 진행시키는 경제연대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와 멕시코와의 협정이 발효한데 이어, 동남아시아 제국이나 한국 등과의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 3) 반도체에 관한 국제적인 대처(반도체 정부 당국 회의; GAMS)

반도체 정부당국 회의(GAMS : Government/ Authorities Meeting on Semiconductors)는 주요 반도체 생산국인 일본, 미국, EU, 한국 및 대만의 정부·당국이 200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정부 및 당국간 회의이다. 이 회의는 환경 문제, 지적 재산권 문제 등 반도체 산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정책 과제에 대해서, 업계로부터의 제언을 기초로 정부 및 당국이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5년에 개최된 제6회 회의에서는 다중 칩 집적회로에 대한 관세 철폐에 합의하는 등, 반도체 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실시하였다.

#### 4) 기준 인증·지적 재산권

제품의 품질의 기준이나 그 인증은 품질이나 안전성의 확보 등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이다. 한편, 전기·전자 분야에 있어서 모방품, 해적판으로 인한 자국 기업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일본 경제산업성은 2국간 협의 등을 통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와 비교, 검토하면서 장벽으로 작용하는 부분에 대한 철폐 및 상대국에 단속의 강화나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데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 3. 결론

일본은 자국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일본 경제산업성의 전기·전자 분야 통상정책을 자국 산업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본 경제산업성이 제시한 WTO를 통한 무역·투자 장벽의 철폐는 날로 치열해 지는 경쟁 속에서 자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중국에 의해 우리나라 제품의 모방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앞서 살펴본 상대국에 대한 단속 강화 및 제도 개선 요청은 우리에게도 절실한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겠다.

#### RoHS 대응 표준

삼성전자, LG전자와 같은 대기업들과 협력사들은 그간의 노력으로 EU의 RoHS 규제지침 시행일(2006년 7월 1일)을 앞둔 현재 대부분의 제품은 RoHS의 규제 기준을 준수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선언했다.

그 예로 PCB(인쇄회로기판)등에 납 성분이 없는 주석계 무연솔더가 사용되고, 6가 크로뮴은 3가 크로뮴으로 대체하였으며, 부식성 방지를 위한 카드뮴은 대체 코팅제를 사용하는 등 RoHS 준수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고 기업의 RoHS 담당자들은 전했다.

그간 RoHS 지침의 근간이 되고 있는 시험방법을 표준화하고 수차례의 산업체교육 등을 실시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이미 세계적 전자업체들은 2005년 가을부터 자사브랜드 제품에 자발적으로 RoHS 준수 표시를 하여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RoHS란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로뮴, 브롬계난연제(PBB, PBDE)가 함유된 전기, 전자 제품은 유럽시장에서 판매가 금지되는 유럽연합(EU)의 강력한 환경규제 조치의 하나다.

연간 1,000억 달러(대 EU 200억 달러)의 전자제품 수출국인 우리나라는 그동안 철저한 RoHS 준비로 10%정도의 수출성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관련업계 및 한국전자산업진흥회 등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부 중소부품업체들은 중금속 등이 없는 대체소재 사용으로 인한 원가부담, 전문인력부족 등으로 아직도 RoHS 대응에는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기술표준원에서는 RoHS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대·중소기업간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내의 환경표준 담당관과 일본 전문가를 초청하여 RoHS 시행에 앞서 마지막 총 점검 차원의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앞으로 기술표준원은 소규모 기업들이 RoHS의 대응 정보가 부족하여 납기일을 못 맞추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기술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